

# 2021년 5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 1. 회의 개최

o 일시 및 참석인원 '해당사항 없음'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4:00~04:30 (재방송 매주 월 00:25~00:55)

o 방송현황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이재원	5/2	<뉴스09> 공공부문 회식금지 등 '특별 방역관리' 주간... 호과는? <뉴스포커스> 홍남기 "9천900만명 백신 확보...집단면역 앞당길 기반" <뉴스1번지> 정치권, 백신 수급 공방...정부 "집단면역 앞당길 것"	
김창숙	5/9	<토요와이드> 도심 노동절 집회...경찰-참가자 간 갈등도 <일요와이드> 노동절 세계 곳곳서 시위...진압과정서 수백 명 체포 <뉴스워치> 머스크 한마디에 또...이번엔 '도지코인' 20% 급등	
김홍태	5/16	<뉴스리뷰> 美 "백신 특허 면제 지지"...당국 "업계 동향 주시" <뉴스투나잇> "세계 코로나 사망자 통계 축소...실제는 690	

		만명" <뉴스워치> 고수의 알바라더니..."졸지에 보이스피싱 공범"	
안호림	5/23	<뉴스워치>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토요와이드> "용변 문제로 네 살 아이 학대"...부모 집행유예 <뉴스17> 이스라엘 경찰-팔레스타인 충돌...200여명 부상	
김창숙	5/30	<뉴스포커스> 문대통령, 3박 5일 밤미일정 마치고 어젯밤 귀국 <뉴스포커스> 興 "건국 이래 최대 성과" vs 野 "절반의 성과"	

##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이재원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교수	2016. 08. 23	-
활동	김창숙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2018. 12. 27	-
활동	안호림	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2021. 01. 26	-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 2021년 5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답변부서
2021 5/2(일)	이재원	정부가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해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한 상황에 의학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것인데요. 기자가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 주말 확진자수와 추세에 대한 분석을 들었습니다. 확진자수는 줄었지만, 주말에 날씨가 좋아 이동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주말 코로나19 확진자와 연결이 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중의 하나인 라이노바이러스가 3월 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지는 걸 의미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일주일간을 '특별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회식, 모임을 전면 금지한데 대해 이 교수는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그룹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4차 대유행과 백신 효과 등 코로나19 관련 국민 불안감이 높아가는 상황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우려에 대해 수치를 제시하며 "정부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 계획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반복하기 보다는 이같은 계획이 갖는 의미를 짚어주는 질문과 답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날 보도는 수급에 대한 불안감에 초점이 맞춰져있지만, 국민들이 백신 부	박진형 기자의 '출근길 인터뷰'는 사회 각 분야 이슈 현장을 찾아가 인터뷰를 해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출연하는 전문가에 정확하게 맞는 질문을 구성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작용 사실을 접하고 갖는 불안감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사인 전문가가 답할 부분은 백신 수급이 아닌, 부작용과 관련된 정확한 지식과 해석일 것입니다.	
2021 5/9(일)	김창숙	5월 1일 <토요와이드>에서는 최근 20~30대 젊은 층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앵커는 고독사하면 흔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 문제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취업난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사는 고독사한 30대 남성의 유품을 보여주며 고독사 현장 청소 전문업체의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2, 3년 사이 2030 젊은 세대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독사의 원인을 취업난,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꼽으며, 최근 4년 사이 40세 미만 무연고 시신처리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 화면을 제공했습니다. 이어 중장년층보다 개인주의 문화가 뚜렷한 청년이 세상과 단절되는 일이 더 많을 수 있고, 또 청년은 건강하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청년 고독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청년들의 고독사 문제를 다룬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였으며, 고독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한 것도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구조의 문제가 있다, 혹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준에 머문 보도내용은 아쉬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문제나 해결책 제시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덧붙여 지난 4월 1일 국가 차원에서 고독사를 막기 위해 마련된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되었는데, 나중에 후속보도를 통해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핵가족화에 따른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고독사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 높은 만큼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	김홍태	지난 5월 7일 뉴스투나잇에서는, 코로나19	지적해주시는 백신특허 면제

5/16(일)	<p>에 걸쳐 사망한 이들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연구결과를 전했는데요, 미국 연구진은 국가별로 많게는 10배가량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초까지, 각국의 집계와 자체 분석한 사망자 수 비교 분석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사망자는 현재 통계의 2배가 넘는 690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주요 발병국이 사망자 수를 현격히 적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연구진이 지적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많은 미국과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에서 공식 보고와 추산치의 차이가 컸고, 일본의 경우 10배 넘게 차이가 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조사를 진행한 보건계량분석연구소 측은 정확한 사망자 수치를 알아야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쳐 사망한 인구가 수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이익보다 인류를 앞세우는 백신특허면제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제약업계가 위탁생산에 강점을 보이고 있고, 지적권 면제가 된다면 백신개발 선발국가를 빠르게 추격할 수 있다고 전한 점은 명쾌했는데요, 다만 WTO 회의를 주시한다고 전하고는 있지만, 백신특허면제를 위한 최종 결정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백신개발회사인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반대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유럽연합(EU), 영국 등이 이에 반대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은 추후 보도에서 집고 갈 문제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인정되어야 하나, 현 상황이 전 세계적 위기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최강국인 미국 대통령의 지지선언이 나온 만큼 시청</p>	<p>절차,백신업계와 유럽연합(EU),영국 등 입장은 다른 리포트에서 일부 다루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후속보도를 하겠습니다. 특허면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어떤 지원을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다룰 계획입니다.</p>
---------	---	--

2021 5/23(일)	안호림	<p>자들은 추후 과정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백신특허면제에 대비하여 어떠한 지원을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에 대하여도 간단한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p> <p>지난 8일 뉴스17에서 사태의 시작점이 된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주민과의 충돌 사건을 보도했고, 5월 11일 뉴스워치에서는 사태의 격화양상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주민의 충돌로 2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을 인용하면서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 마지막 주 금요일인 7일 예루살렘에서 주민 수천 명과 이스라엘 경찰이 충돌해서 팔레스타인 주민 200여명, 이스라엘 경찰 10여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사건의 발단이 된 5월 7일 충돌보도부터 계속해서 관련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대부분이 짧은 사실기사거나, 외신을 인용한 보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오랜 역사를 가진, 종교적 대립,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정착지구를 둘러싼 양국의 분쟁, 중동을 둘러싼 세계 강대국들의 입장 차이와 외교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현 시국으로 좀해보아도,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이 이번 사태로 인해 큰 시험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사태를 이해하려면 배경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현재 국제정세, 미국의 외교정책의 변화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연합뉴스TV보도는 국지적인 사건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5월 8일 보도에서 이날 충돌이 동예루살렘 정착촌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는 짤막한 언급은 사건의 핵심을 짚어주지 못하는 막연하고 피상적인 설명입니다. 이에 반해 해외언론은 사태에 대해 연일 상세한 분석기사, 해설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을 종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깊이 있는 기사가 가능합니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사쓰기가 아쉽습니다.</p>	<p>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 관련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보도한다고 했는데 여러모로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2021 5/30(일)	김창숙	<p>지난 5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p>	<p>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대면으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기존 외교안보적</p>

	<p>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이었는데,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정책부터 백신, 경제협력까지 여러 현안들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문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두고 최고의 순방이었다고 자평했고, 여권도 연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절반의 성과라고 평가해 이번 회담의 성과를 바라보는 여야간의 온도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5월 24일 &lt;뉴스포커스&gt;에서는 이번 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lt;뉴스포커스&gt; 뿐만 아니라 &lt;뉴스1번지&gt;, &lt;뉴스센터&gt;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번 회담결과에 대한 평가 내용을 다양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흥미위주의 보도가 아닌 이번 회담의 가장 핵심인 공동성명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내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인터뷰도 각 이슈들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을 구하는 질문이 많아 좋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생소한 단어를 시청자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생방송이다 보니 영상이나 자막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p>	<p>측면 뿐 아니라 보건, 경제 분야에서도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각 분야별로 회담의 의미와 함께 향후 한미 관계의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p> <p>지적된 내용 중에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 등은 대담 중이라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이재원 시청자평가원(21. 05. 02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92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정부가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한 상황에 의학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것인데요. 기자가 이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 주말 확진자수와 추세에 대한 분석을 들었습니다. 확진자수는 줄었지만, 주말에 날씨가 좋아 이동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주말 코로나 19 확진자와 연결이 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중의 하나인 라이노바이러스가 3월 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지는 걸 의미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일주일간을 '특별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회식, 모임을 전면 금지한데 대해 이 교수는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그룹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4차 대유행과 백신 효과 등 코로나19 관련 국민 불안감이 높아가는 상황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 수 있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우려에 대해 수치를 제시하며 "정부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 계획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반복하기 보다는 이같은 계획이 갖는 의미를 짚어주는 질문과 답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날 보도는 수급에 대한 불안감에 초점이 맞춰져있지만,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 사실을 접하고 갖는 불안감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사인 전문가가 답할 부분은 백신 수급이 아닌, 부작용과 관련된 정확한 지식과 해석일 것입니다. 같은 날 오전 뉴스포커스에서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9천900만명 백신을 확보했다"며 "집단면역을 앞당길 기반"을 마련했다는 대국민 담화 발표를 [현장연결]로 전했습니다. 홍남기 직무대행이 기존에 계약된 백신 1억5,200만 회분, 즉 7,900만 명분에 더해 화이자 측과 백신 2,000만 회분을 추가 계약해 총 1억9,200만 회분, 즉 9,9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발표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백신 수급 계획 △접종 계획 △백신 안전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고, 11월 중 집단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월26일 <뉴스1번지>에서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민현주 전 의원과 함께 백신 수급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 2,0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힌 뒤 여당은 공급 기반을 마련한 쾌거라고 했지만, 야당은 공급 시기와 양을 정확히 밝히고 '11월 집단면역'의 로드맵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현 전 부대변인은 "이스라엘이 마스크 벗고 공연도 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한다"며 "결국 집단면역을 언제 달성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화이자 추가 계약으로 9900만명분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했으나 이것을 실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9월 넘어가면 웬만한 사람들은 맞지 않을까"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사실 백신에 대해서는 완벽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백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각을 세우는 모양새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은 러시아 백신 도입을 찬성하는 설문조사 결과는 "집단 면역을 하루 빨리 달성하자는 측면에서 어쨌든 백신을 빨리 공급해서 마스크 벗게 해 달라는 여망이 담긴 설문조사"라며 "정부가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러시아 백신 빨리 도입하자는 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민 전 의원은 "백신 정치화"라는 말을 하는데 어떤 지점에서 정쟁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빨리 정확히 언제 백신이 들어와서 국민이 1,2차 접종을 맞는지, 만약 기저질환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국가가 얼마나 책임을 질지 답을 해 달라는것이지 정쟁화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수급과 안전성 문제에 관해 정계, 의료계의 목소리가 담긴 보도들이 이어졌지만,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확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형 기사는 부족했습니다. 원본적인 이야기 혹은

불안감을 더하는 기사나 대담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백신 계약 체결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백신의 수입 일정, 각 지자체별 접종 계획, 해외 부작용 관리 방법 및 국가의 보상 시스템 등 다방면의 탐사 취재 보도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연합뉴스TV는 4월26일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거머쥐었다는 보도를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4월 26일 <뉴스큐브>에서는 윤여정이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에서 국내 취재진을 상대로 가진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현장연결]해 생생히 전했습니다. 윤여정이 여우조연상 경쟁 상대였던 글렌 클로스가 상을 받기를 원했다며 “배우라는 직업이 여러분은 그냥 잠깐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나는 배우를 오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에 되는 스타하고 배우는 달라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전했습니다. '미나리'에 출연하게 된 이유, 아카데미 시상식에 가족이 아닌 한여리와 함께 동행하게 된 사연, 평소 연기 철학, 남다른 입담 비결 등 현지에서 취재 기자들의 질문에 윤여정이 답하는 과정을 여과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영화 평론가가 스튜디오에 등장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의 의미를 짚어주었습니다. 이어서 뉴스1번지에서는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4관왕을 휩쓸었지만, 한국 배우의 오스카 연기상은 사상 처음이라고 의미를 짚어주었습니다. 아시아에선 1957년 영화 '사요나라'의 우메키 미요시 이후 64년 만입니다. 윤여정은 수상 직후 “믿을 수 없다”며 정 감독을 비롯한 미나리 팀에 감사를 표했고, 스크린 데뷰작 '화녀'의 고(故) 김기영 감독을 언급하며 “살아 계셨다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뉴스워치에서는 윤여정의 50년 연기 인생을 분석했습니다. 1971년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화녀'로 충무로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총나' '죽어도 좋은 경험' 등에 출연한 필모그래피를 영상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2010년 임상수 감독의 영화 '하녀'에서 '병식'역을 맡아 국내외 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고, 6년 뒤 이재용 감독의 '죽여주는 여자'에선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노년 여성역을 소화해 주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윤여정의 연기 인생을 '진심'이라는 키워드로 구성, 기획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또, 아카데미 수상 후 가진 기자회견의 윤여정 발언을 토대로 '절실함'에서 저력이 나왔다고 분석하는 등 발빠르게 현장 회견 내용을 삽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회견 현장의 연결, 연기 분석, 전문가 대담 등 기획까지 다양한 유형의 기사로 한국 영화사상 첫 아카데미 연기상의 의미를 잘 짚어주었습니다.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21. 05. 09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9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5월 1일은 131주년 세계노동절이었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국내에서도 수많은 노동단체들이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지키라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5월 1일 <토요와이드>에서는 노동절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어진 노동단체들의 집회 현장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민주노총 집회가 열린 여의도 LG 트윈타워 앞의 집회 현장 모습을 보여주며, 본대회에는 대표자 등 소수만 참석했고, 다른 참석자들은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방향으로 마포대교를 건너 행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건설노조는 여의도에서 경총회관까지 차량 9대로,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종로구 전태일거리에서 중구 서울고용노동청까지 도보로 행진한 소식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9명을 초과한 집회 인원을 두고 경찰이 개입에 나서자, 집회 참가자들이 반발하며 방역수칙 위반을 놓고 경찰과 참가자 사이에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집회 해산을 공지했지만, 이후에도 한동안 집회가 계속되는 등 갈등이 지

속된 현장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9인 초과 집회의 주최자 등에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날 <뉴스1>에서는 앵커가 기자에게 4월 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집회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는 집회 현장은 다소 혼잡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며, 집회 인원을 놓고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에 갈등이 일다가 결국 경찰이 현장에 자진해산을 통보했다고 답했습니다. 이곳에 배치된 경찰은 당초 “신고 인원이 방역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거리두기가 무너지고 집회 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가 목격되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방송을 통해 “9인 이하로 집회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참가자들이 “왜 모이지 못하게 하나”며 반발하며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특이상황 발생 시 즉시 집회금지 통보를 한다는 조건 하에 집회를 허용했다”고 밝혔는데, 결국 오후 2시 40분쯤 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2일 <일요와이드>에서는 노동절을 맞아 전세계 곳곳에서도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와 리옹 등 약 300곳에서 열린 집회에 10만 6천 명이 넘게 참여했다는 프랑스 내무부의 발표내용을 전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시위대가 코로나19 관련 모임 제한 조치를 어기며 경찰과 충돌했는데, 터키에서만 200명 넘는 시위대가 미허가 집회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독일에서도 노동자 시위가 전국에서 열린 가운데 일부 시위대는 밤이 되자 바리케이드에 불을 지르며 경찰과 대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노동절 관련 연합뉴스TV의 보도내용을 보면, 문제인 대통령이 일 자리를 더 많이 부지런히 만들겠다고 밝혔다는 보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외 집회소식과 경찰과의 갈등상황을 전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일날이라 할 수 있는데,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거의 전해 듣지 못하고, 집회와 갈등상황만 부각되는 것 같아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취지에 맞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노동자 처우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등 노동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는 보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4월 29일 <뉴스워치>에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올린 트윗 하나에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머스크가 가상화폐 옹호자로도 유명한데, 4월 27일 밤, 머스크가 가상화폐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듯한 도지파더, 즉 도지코인의 아버지라는 뜻이 담긴 트윗을 올리자 도지코인 가격이 20% 급등했다고 전했습니다. 도지코인은 인터넷에서 인기를 끈 시바겐 사진을 토대로 장난삼아 만들어진 가상화폐인데, 최근 머스크의 도지코인 옹호 발언 등에 힘입어 여섯 번째로 덩치가 큰 가상화폐로 부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스크는 비트코인 지지자로도 유명한데, 테슬라는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3천억원어치 비트코인을 팔아 1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행진 사실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3월 말 현재 기준 2조 8천억원어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1월 환율 기준으로 1조 6천 710억원을 투자한 점을 감안하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이익을 본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2일 <일요와이드>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사기 등 범죄가 2년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한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기자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SNS에 코인 리딩을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공유방이 나온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며, 고수익을 인증하면서 투자를 권하고 유료 리딩방에 가입하면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를 모아 시세 조종을 하거나 연락을 끊고 증적을 감춰 버리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유사 수신 같은 관련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1위 거래소인 빗썸 실소유주가 신규 코인을 판매하고 상장하지 않아 검거되는가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 플랫폼 사업 투자를 미끼로 1천여 명에게 276억원을 가로챈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실제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2018년 62건에서 2020년 337건, 검거 사범도

139명에서 537명으로 2년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경찰과 금융 위 기재부 등 유관기관이 합동 대응하는 한편 가상자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리딩방 정보에 속아 피해를 보더라도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주식과 달리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가상화폐가 제도권 밖 무법지대에 있는 동안 투자자만 계속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환기시켰습니다. 최근 가상화폐가 급격하게 등락을 계속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아직 제도가 미비하고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면 개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대표적인 사기 수법들을 소개한 보도는 범죄 피해예방 차원에서 적절했다고 생각됩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고 정확한 정보도 부족한 분야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장인데요, 언론이 적극적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내용들을 취재하고 전달해 시청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 <토요와이드>에서는 최근 20~30대 젊은 층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앵커는 고독사하면 흔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 문제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취업난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자는 고독사한 30대 남성의 유품을 보여주며 고독사 현장 청소 전문업체의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2, 3년 사이 2030 젊은 세대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독사의 원인을 취업난,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꼽으며, 최근 4년 사이 40세 미만 무연고 시신처리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 화면을 제공했습니다. 이어 중장년층보다 개인주의 문화가 뚜렷한 청년이 세상과 단절되는 일이 더 많을 수 있고, 또 청년은 건강하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청년 고독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청년들의 고독사 문제를 다룬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였으며, 고독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한 것도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구조의 문제가 있다, 혹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준에 머문 보도내용은 아쉬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문제나 해결책 제시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덧붙여 지난 4월 1일 국가 차원에서 고독사를 막기 위해 마련된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되었는데, 나중에 후속보도를 통해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1. 05. 16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9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백신특허 면제에 대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선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고수익 알바의 미끼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내용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7일 뉴스리뷰에서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특허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면, 한국 등 백신 개발 후발주자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으로, 우리 당국도 업계동향을 주시하면서, 기술장벽 극복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특허 면제를 지지한다며, 지난 5일 백악관 논의의 포문을 열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신 특허권 포기를 지지하실 건가요란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몇몇 제약사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첫 단

추를 꺾었다는 국제사회의 뜨거운 반응에도, 국내 원천기술이 없는 mRNA 플랫폼은, 단기간 개발이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이어졌는데,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는 서류상으로 공개를 한다고 해서 어느 제약사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약사가 핵심 노하우 이전을 위해 적극 나설거라 기대하기 힘들고, 원료물질 확보와 생산시설 마련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이달 중순쯤 WTO 회의를 앞두고, 지식재산권 면제 범위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추한 코로나19 백신개발사무국 총괄팀장은 지재권 면제만 하는 것인지, 생산기술을 포함한 영업기밀까지 공개하겠다는 건지,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검토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우리 제약업체가 위탁생산에 강점을 보이는 만큼, 지재권 면제는 백신 개발 선발국가를 빠르게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은데요, 성백린 연세대의대 특임교수는 짧은 시간 내 압축해서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하는 거니까 신속하게 생산에 뛰어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의료계에선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반복 유행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이때 세계적 백신 생산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단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7일 뉴스투나잇에서는,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이들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연구결과를 전했는데, 미국 연구진은 국가별로 많게는 10배가량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초까지, 각국의 집계와 자체 분석한 사망자 수 비교 분석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실제 사망자는 현재 통계의 2배가 넘는 690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주요 발병국이 사망자 수를 현격히 적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연구진이 지적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많은 미국과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에서 공식 보고와 추산치의 차이가 컸고, 일본의 경우 10배 넘게 차이가 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조사를 진행한 보건계량분석연구소 측은 정확한 사망자 수치를 알아야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인구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이익보다 인류를 앞세우는 백신특허면제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제약업체가 위탁생산에 강점을 보이고 있고, 지재권 면제가 된다면 백신개발 선발국가를 빠르게 추격할 수 있다고 전한 점은 명쾌했는데, 다만 WTO 회의를 주시한다고 전하고는 있지만, 백신특허면제를 위한 최종 결정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백신 개발회사인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반대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유럽연합(EU), 영국 등이 이에 반대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은 추후 보도에서 집고 갈 문제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인정되어야 하나, 현 상황이 전세계적 위기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최강국인 미국 대통령의 지지선언이 나온 만큼 시청자들은 추후 과정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백신특허면제에 대비하여 어떠한 지원을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에 대하여도 간단한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5월 6일 저녁 뉴스워치에서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7천억원에 달한다면,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꼬드겨, 범죄에 가담시키는 일이 늘고 있으며, 자칫하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하림 기자는 단독보도를 통해 60살 A씨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수입이 줄자, 지난 3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시작했는데, 대부분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업체에 전달하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경험자 A씨는, 저속은행 모

과장, 모 대리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고객이 돈을 준다며, 2, 3천만원 주면 몇 억을 대출해 준다고 하니까 고객들이 수천만원을 갖다가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달 반 일하면서 A씨가 전달한 돈은 약 2억 원, 한 번에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받아 업체가 알려준 계좌에 입금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회수와 액수가 커지고, 업체 측 지시가 오락가락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A씨가 업체가 보이스피싱 일당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었고, 경찰서에 찾아가자 “보이스피싱이 유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높은 수입에 현혹돼 A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불법성을 인지할 정황이 충분했다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로부터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주범을 추적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뉴스투나잇에서는 조한대 기자의 단독보도로, 보이스피싱범들이 이제 편의점까지 노리고 있다면서, ‘구글 기프트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자신들의 기프트 카드에 돈이 들어가도록 하거나, 현금처럼 쓰는 문화상품권 핀 번호까지 뺏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직원 A씨는 구글 본사 직원이라며 기프트카드 재고 파악을 해야 한다고, 카카오톡에 자신을 추가하라고 해서 실물 카드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카드 핀 번호를 직접 보내줬다고 했는데요, 보내준 핀 번호들을 스캔하는 순간, 카드 충전용으로 가게가 갖고 있던 예치금 20만원이 모두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보낸 기프트카드 바코드로 돈이 충전되자, 범인은 판매 목적으로 가게에 있던 문화상품권도 눈독을 들였는데요, 직원은 범인 지시대로 7만원 어치 문화상품권의 스크래치를 모두 긁어 핀 번호를 전달했습니다. 범인은 사장과 이야기가 다 됐으며, 구권을 신권으로 바꾸려면 핀 번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피해자는 범인이 편의점 운영 방식을 잘 알고 있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범인의 뒤를 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생활고로 인해 약간의 고액 일당을 제시하여도 그 일을 맡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범죄일수 있다는 약한 정도의 인식만 있어도 사기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앞두고 있는 젊은 층이 범죄에 이용당하기 쉬운데요, 이 보도와 같은 내용을 널리 알려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보도들이 점점 늘면 사기의 방조범 등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더 막을 수 있는데요, 단독보도로까지 방송한 것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들을 사기죄의 방조범 심하면 공동정범으로까지 기소하는 형태에 대하여는 조금 더 알아보고, 주범을 잡기 힘든 구조에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범죄예방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처벌의 수위가 과한 것은 아닌지 등도 조사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 5월 8일 오전 토요와이드에서는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기로 한 것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플랫폼 업계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거세지는 흐름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고 전하는데요, 올해 10월부터는 모든 앱 안에서 한 결제금액의 30%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에 돌아갑니다. 이런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중인데 부당성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이황 고려대 ICR센터 소장은 30%라는 수수료를 얻기 위해서 끼워팔기 배타조건부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경쟁 제한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앱결제를 강제하게 된 배경은, 앱에 우회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플랫폼 사업자 입장

에선 수입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비단 이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며, 세계적인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고 30% 수수료를 챙겨가는 애플을 상대로 소송 중인데요, 이달 초 미국에서 재판이 시작되었고, 결과에 따라선 수수료 정책부터 앱 마켓 운영 방식까지 뒤바뀔 수 있어 이목이 쏠립니다. 앱마켓 수수료는 결국 앱 개발사들과 이용자들이 부담해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도 지난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를 위반했다며 애플에 최대 수십조 원대 벌금 부과를 예고했는데요, 30%의 수수료 인앱 결제 방식 강제와,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가 다른 결제 통로를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없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인앱결제 의무화가 개발사에 불이익한 부분이 있는지, 결제대행 등 인접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지난 달부터 이번 달까지 대형 글로벌 플랫폼 3사의 디지털 광고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플랫폼 사업의 효용성과 폐해의 문제 때문입니다. 플랫폼 운영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통해 참가 주체들에게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국회 통과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 규제 관련 입법안을 놓고 서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의 보도내용과 같이 플랫폼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하여는 집진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앞으로 규제 입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호림 시청자평가원(21. 05. 23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95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5월 14일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른바‘정인이법’을 제정해서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동 학대 사건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에는 두 살 된 입양아를 학대한 혐의로 30대 양부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 연합뉴스TV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뉴스위치에서는 정인 양 사건 1심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상세한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는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정인이 사건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가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전합니다. 기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양모 장씨의 경우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들, 특히 주된 혐의인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인이의 사인이 채장 절단 등 복부 손상이었는데, 장씨가 누워있는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았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정인이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부 안씨는 아내의 폭행과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양모 장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검찰은 처음 기소할 때는 아동학대처사 혐의만 적용했다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살인죄를 추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의성 없이는 정인이 채장이 절단되는 정도까지 복부가 손상되기 힘들다고 본 것입니다. 석달 간 재판에서는 고의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부검의와 법의학자 모두 고의성을 인정한다고 증언해 재판부는 결국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부실 대응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정인이가 입양된 후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도, 경찰과 보호기관은 학대정황을 찾지 못한 채 정인이를 양부모에게 돌려보내 경찰은 신고를 부실처리한 양친 경찰서장과 담당 경찰관을 중징계했고,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최근 경기 화성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전하면서 아동학대가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 화성에서 지난 어버이날 두 살배기 입양아를 학대한 혐의로 양부 A씨가 체포된 사실을 전했는데요. 양부 A씨는 입양아가 청얼거린다고 아이를 수차례 때렸는데 아이가 깨어나지 않자 병원에 갔는데 의료진이 뇌손상과 명자국 등을 발견하고 학대 신고를 한 결과 체포된 것입니다. A씨는 지난 11일 구속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정인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됐지만 문제는 학대 가해자들이 법 적용을 생각하며 행동하지 않는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사전처벌 강화 뿐 아니라 사전 예방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민간이 담당하는 입양체계에 공공기관이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개입해야 하고 아이의 양육상태, 신체 건강에 대한 보다 꼼꼼한 기록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사건이 터질 때만 반짝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어른들이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한편 5월 8일에도 또 다른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판결 소식이 두건 있었습니다. 토요와이드에서는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열 한곳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에 대한 재판 소식과, 용문 문제로 네 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에 대한 재판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토요와이드에서는 4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26살 A씨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학대행위를 말리지 않은 친모 26살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이가 번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진 오후 토요와이드에서는 생후 3개월 된 딸의 두개골 등 열 한 곳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영지원은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마흔 시간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꾸준히 보도해오고 있습니다만, 뉴스워치와 뉴스큐브에서 심층 보도가 2번에 그쳤고, 대부분 짤막한 사실 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5월14일 뉴스워치에서는 정인 양 사건과 아동 학대 문제 전반에 대해 기자가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보도하였고 뉴스큐브에서는 전문가의 심층 분석을 전했습니다. 뉴스큐브에서는 정인 양 사건에만 그치지 않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과 언론의 보도태도까지 분석해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14일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아동학대는 모두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연합뉴스TV가 정인 양 선고 공판을 심층 보도한 것은 이런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관심이 연합뉴스TV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번과 같이 선고공판이 있을 때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와 같은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계속해서 기획기사, 특집기사 등을 통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직접 기자들이 취재하고 분석하는 이른바 ‘발품을 팔아’ 만드는 기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일보직전까지 치달으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지난 8일 뉴스17에서 사태의 시작점이 된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주민과의 충돌 사건을 보도했고, 5월 11일 뉴스워치에서는 사태의 격화양상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주민의 충돌로 2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을 인용하면서 이슬람 급식성원인 라마단 마지막 주 금요일인 7일 예루살렘에서 주민 수천 명과 이스라엘 경찰이 충돌해서 팔레스타인 주민 200여명, 이스라엘 경찰 10여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이날 충돌이 동예루살렘 정착촌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 뉴스워치에서는 하마스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현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이 이루어졌고, 이에 즉각 이스라엘군이 전투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으로 반

격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합니다. 기사는 베냐민 네타냐후의 발언을 인용해 이스라엘의 강경한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번 사태가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시위대의 충돌로부터 시작했는데, 나흘째 이어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시위를 이스라엘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탄을 동원, 강경진압하면서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사는 후삼 주물라트 팔레스타인 주영국 대사의 발언을 인용해 팔레스타인 측은 이번 사태를 수년 동안 팔레스타인에 대해 조직적인 인종청소를 보여온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핵심이라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미국과 이웃국가들의 긴장완화 노력을 전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5월 13일 뉴스 투나잇에서는 미국의 반대로 UN안보리 성명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군사충돌사태가 전면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강대국들이 양측에 긴장완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을 적극 두둔하면서 유엔 안보리 공동 성명 채택조차 무산시켰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중국 외교부 등의 긴장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비해 독일, 미국 등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 사태 논의를 위해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는 미국의 반대로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TV는 사건의 발단이 된 5월 7일 충돌보도부터 계속해서 관련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대부분이 짧은 사실기사거나, 외신을 인용한 보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오랜 역사를 가진, 종교적 대립, 가지지구 팔레스타인 정착지구를 둘러싼 양국의 분쟁, 중동을 둘러싼 세계 강대국들의 입장 차이와 외교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현 시국으로 좁혀보아도,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이 이번 사태로 인해 큰 시험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사태를 이해하려면 배경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현재 국제정세, 미국의 외교정책의 변화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연합뉴스TV보도는 국지적인 사건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5월 8일 보도에서 이날 충돌이 동예루살렘 정착촌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는 짤막한 언급은 사건의 핵심을 짚어주지 못하는 막연하고 피상적인 설명입니다. 이에 반해 해외언론은 사태에 대해 연일 상세한 분석기사, 해설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을 종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깊이 있는 기사가 가능합니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사쓰기가 아쉽습니다.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21. 05. 30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49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5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이었는데,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정책부터 백신, 경제협력까지 여러 한안들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문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두고 최고의 순방이었다고 자평했고, 여권도 연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절반의 성과라고 평가해 이번 회담의 성과를 바라보는 여야간의 온도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5월 24일 <뉴스포커스>에서는 이번 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부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두 정상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데, 단독정상회담에서 오찬과 더불어 예정보다 긴 시간동안 다양한 의제를 논하며 향후 4년 한미관계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였는데, 미국이 확장 역할을 포함해서 한미간의 연합방위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말함으로써 한미군사동맹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사일 주권을 찾아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동북아에서도 우리의 자위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한미간의 경제협력, 백신 공급,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고 총평했습니다. 이에 앵커는 이슈별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번 회답이 남북관계 개선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먼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교수는 이번에는 정상 차원의 큰 틀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을 재개하겠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고, 미국 측에서 판문점 선언을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마련된 것이고, 싱가포르 합의문 토대 위에서 북미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북미관계 역시 이미 만들어진 토대 위에서 진행된다는 연속성이 담보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북한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대북특별대표로 성 킴이 임명된 것도 미국에서 실무팀이 구성됐고, 실무협상에 나갈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답에서 정상 차원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고, 대북 실무협상의 대표가 지명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하는 일만 남았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어 앵커는 42년 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고, 공동성명서에 쿼드, 대만, 남중국해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대중관계에서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교수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둘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가지고 국익을 추구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 앞으로 과제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성명이 중국을 심각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분석하면서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과는 다르게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을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해양에 있어서 항해의 자유나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원칙에 대해, 또 한국에게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루트인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에 대해 당연히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를 지명해서 잘 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주권문제, 내정간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중견국, 선두국가인 한국이 보편적 원칙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준수하고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필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관련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민 교수는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해지는 분야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기술 분야, 핵심소재 장비 같은 핵심적인 제조업 분야,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전략사업인 의료 등이기 때문에 백신 같은 의료물품이 우리가 미중간의 갈등을 피하면서도 국익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분야 중의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인 만큼 연합뉴스TV도 관련 이슈를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뉴스포커스> 뿐만 아니라 <뉴스1번지>, <뉴스센터>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번 회담결과에 대한 평가 내용을 다양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흥미위주의 보도가 아닌 이번 회담의 가장 핵심인 공동성명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내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인터뷰도 각 이슈들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을 구하는 질문이 많아 좋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생소한 단어를 시청자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생방송이다 보니 영상이나 자막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포커스>는 이어진 보도에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초청해 이번 회담 성과를 바라보는 양 측의 입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먼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힘이 '절반의 성과'라고 평가한 것만 보아도 이번 회담이 많은 성과를 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변인은 대변인 시절 여러 정상회담에 참석해 봤지만, 이번처럼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역대급 정상회담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존 국제 정치질서에서 한국은 소비자적 위치였지만 이번에는 비로소 포스트 코로나시대, 4차 혁명시대를 맞이해서 한미동맹이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한 선명한 청사진을 보여준 역사적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고, 기존의 의존자적인 입장에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전지구적 공공재를 서로 만들고 고민해나가는 협력자 위치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는 점에 수긍하면서도 관점을 두가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은 측면으로 다자외교를 추구했던 문대통령이 동맹외교를 복원했다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대통령이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으며 중국을 조금하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절반의 성과라고 말한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부분에서 미국은 44조원 가량의 한국의 투자를 유치한 반면, 한국은 북한 문제를 빼면 백신 55만명 분만 가져온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 얘기도 있지만, 이미 SK바이오 사이언스 등이 생산하고 있고, 판매처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라이선스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해득실 차원에서 보면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야당이 백신 문제를 55만명 분으로 국한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면서 왜 스와프를 못했냐고 비난할 것을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와프는 백신 확보가 부족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억 9천 2백만 분의 백신을 확보해서, 인구 1인당 27회를 접종할 수 있다. 미국 듀크대의 공식 통계를 보더라도 세계 9위로 백신이 부족한 나라가 아닌데 왜 자꾸 스와프를 하라고 하는가? 55만명 분은 깜짝 선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허브로서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또다른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병이 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인데, 세계 제일의 백신기술의 가진 미국과 제2의 생산기술을 가진 한국이 백신동맹을 맺은 것은, 결과적으로 백신을 미국 등 특정 국가의 소유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공공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한 것이고, 우리 국민을 위한 백신도 더 자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백신을 전지구적인 공공재로 만드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데 기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부위원장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백신 스와프를 처음 언급했는데,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수급 물량 차원에서 지금 당장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백신이 남게 되면 그때 돌려주겠다는 것이니,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전체 백신 물량 확보가 많은 것은 맞지만, 당장 필요한 백신 확보가 덜 된 것도 사실이니가 당장 수급이 안되는 것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백신 스와프에 대한 추상적인 약속이라도 받아왔으면 좋았겠다는 야당의 시각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마무리되고 얼마되지 않아 나온 보도들이라 아무래도 국내 반응에 초점이 맞춰진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회담 결과를 둘러싼 여야간의 입장차가 있다 보니 그 부분이 많이 전달됐는데요. 여야간의 입장차와 같은 국내 반응에만 집중하다 보면 아무래도 침예한 대립이 있는 이슈로 논의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워낙 복합적인 문제와 얽혀있고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도 대립되는 부분도 있어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미국을 포함해 관련 국가들이 내놓는 평가나 반응 등도 폭넓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실용적인 후속조치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과제인데요, 연합뉴스TV가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p> <p>2021년 5월 02일 04시 / 이재원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p> <p>2021년 5월 9일 04시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p> <p>2021년 5월 16일 04시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p> <p>2021년 5월 23일 04시 / 안호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p>
<p>2021년 5월 30일 04시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